

회 의 록

회의명		2023년도 제1차 대학평의위원회				
일 시		2023. 2. 8.(화) 16:00 ~ 18:00				
장 소		대학본부 별관 1층 CNU Hall				
의 안		대학통합 논의 조직 구성(안)에 관한 학무회의 심의·의결사항				
심의사항		[제1호] 대학 통합 논의 조직 구성(안)				
심의결과		[제1호] 조직 구성안에 동의하되, 위원 임기 수정 및 통합기획위원회 등에 학생을 포함한 직능단체별 위원 참여 확대 제안				
참석현황	참석 대상자	22명	위임 내역	위임장 제출: 6명 류광해, 이향배, 서영식, 이택승, 손정훈, 전득수	참석자	참석자: 13명 신희권, 이후승, 전정임, 조성범, 김태섭, 김지수, 윤난희, 이재훈, 김필형, 최인용, 김채현, 안선민, 최유진
	참석자	19명				
	불참자	3명	불참 내역	서보국, 정주영, 조강희		
주요 발언내용						
<div>■ (개회 선언 및 성원 보고) 재적위원 22명 중 위임 3명 포함 19명 참석.</div> <div>■ (전차회의록 검토 및 확인) 2022년 제5차 대학평의위원회 서면 심의 결과, 수정 없이 원안으로 확정.</div> <div>■ 의안 제4호 심의</div> <div>○ 의장(○○○): 제1호 안건 대학 통합 논의 조직 구성(안) 상정.</div> <div>○ 기획처장(○○○): 회의 자료에 따라, 제1호 안건 제안 설명.</div> <div>○ 의장(○○○): 의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학무회의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알려주면 논의가 더 수월해질 수 있을 것임.</div> <div>○ 기획처장(○○○): 통합총괄위원회의 전임교원 구성원 중 총장 및 보직자인 위원의 임기는 ‘임기중’으로, 학장단·교수 추천 위원은 초안에서 ‘임명일로부터 2년’이었으나 논의를 거쳐 ‘임명일로부터 1년(연임가능)’으로 확정함. 또한, 통합 관련은 중요 사안이기에 ‘참석 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구체적으로 명시함.</div> <div>○ 교무처장(○○○): 기획위원회의 숫자가 초안의 12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었고,</div>						

각 분과에 있는 소분과를 구성하게 될 때 거의 모든 학과장들이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각 학과들이 참여하는 모습에 관한 질문들이 있었음.

- 기획처장(○○○): 교육·연구1분과에서 유사학과에 있는 모든 학과장들이 실질적으로 통합 모델을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소분과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 의장(○○○): 총장, 교학부총장, 연구산학부총장은 임기가 있어 ‘임기중’이 맞는데, 보직자를 염두에 둔다고 해도 직위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전·특성화분과장, 교육·연구1분과장, 교육·연구2분과장, 학생지원 분과장은 ‘임명일로부터 1년(연임가능)’의 표현이 맞을 것 같음.
의안 제1호 안건 대학 통합 논의 조직 구성(안)에 대해 논의하겠음.
- 의원(○○○): 행정·인프라분과장도 직위를 명시하지 않았기에 ‘임기중’이라는 표현을 수정해야 함. 각 분과장에 어떤 보직자를 염두에 두었다면 설명 추가 필요. 통합기획위원회의 분과에서도 위원 수, 임명 주체, 범위 등의 명시 필요.
- 기획처장(○○○): 한발대와 합의된 내용은 기획위원회 15명 이내, 5개의 분과를 구성한다는 것이고, 분과 밑에 소분과는 자체적으로 필요에 따라 둘 수 있게 되어 있음.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기획위원회 구성 후 논의를 거쳐, 다시 보고하겠음. 임기 부분의 수정 사항은 반영하겠음.
- 의원(○○○): 통합기획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지?
- 기획처장(○○○): 학생지원분과에서 학생 참여 가능.
- 의원(○○○): 유사학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교육·연구1분과에도 학생 참여 요청.
통합총괄위원회에 학생 구성 비율 상향도 추가 요청.
- 기획처장(○○○): 통합총괄위원회의 구성 비율은 직능단체별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평의원회 의원 구성 비율을 준용함. 통합 모델안이 총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해도 전체 구성원의 통합 찬반 투표가 이루어져야 최종적으로 통과 가능.
- 의장(○○○): 통합총괄위원회의 구성 비율 조정은 직능단체별 갑론을박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통합기획위원회의 학생지원분과나 교육·연구1분과의 내부 구성원으로 학생 대표들이 참여해서 의견도 개진하고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정도가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함.

- 의원(○○○): 어떤 분과에서 몇 퍼센트의 학생 참여가 가능하게 구체적으로 약속하면 학생들 설득 가능.
- 기획처장(○○○): 몇 퍼센트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으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과를 구성할 것임.
- 의원(○○○): 통합 찬반 투표에 대한 추가 설명 필요.
- 기획처장(○○○):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으나, 통합총괄위원회에서 최종 모델, 통합 찬반 투표 시기부터 절차 등이 결정될 것임.
- 의원(○○○): 통합기획위원회의 구성원이 통합총괄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절차적 하자로 보임. 기획했던 위원들이 심의·의결까지 하면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없음. 반대하는 쪽에서 절차의 하자를 거론할 수도 있음.
- 의원(○○○): 통합기획위원회의 각 분과별 독립된 모델안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해 관계가 없으면 통합총괄위원회에서 각 안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음. 또한, 참석 위원의 2/3가 찬성해야 하므로 구성원의 일부가 겹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함.
- 의장(○○○): 의사결정 구조 관련해서 보면 의원내각제의 경우, 일부 의원들이 집행부의 각 부처 수장을 겸하고 있어서 안도 만들고 의회 의결에도 참여함.
- 기획처장(○○○): 통합총괄위원회는 최종안을 만드는 조직이고, 한발대와 그 안이 합의되어야 함. 또한, 통합 여부는 전체 구성원의 최종 투표로 결정됨.
- 의원(○○○): 학칙 개정 등 통합 논의 프로세스에서 학무회의와 대학평의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기획위원회의 5개분과는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특이사항이 나올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의 보완 계획이 있으신지?
- 기획처장(○○○): 논의 과정에서 학칙 개정 등이 필요하다면 학무회의, 대학평의위원회를 거치겠지만, 소위원회 바뀌는 것 등은 통합총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 중임. 그래서 대학평의위원회 구성을 준용해 통합총괄위원회 구성안을 만든 것임.
- 의원(○○○): 의결 정족수가 22명 중 15명이고, 기획위원회와 겹치는 위원의 수가 5명이고, 5명으로 의결이 될 수 없기에 절차상 하자라고까지는 볼 수 없음. 모델보다는 전체 구성원의 통합 여부 최종 투표와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해 참여하게 대립될 수 있음. 최종 투표에 관한 사항을 통합총괄위원회에서 의결하는지? 통합총괄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명확할 필요가 있음.

- 기획처장(○○○): 원래 안은 통합총괄위원회에서 최종 투표에 관한 사항도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보겠음.
- 의장(○○○): 최종 투표에서 참여하게 대립할 때, 예를 들어, 5개 그룹 중 3~4개 그룹은 찬성하고, 어느 한쪽 그룹이 반대가 있다고 할 때, 대학평의회를 거칠 가능성이 있고, 그래야 총장의 부담이 없음. 만약, 구성원의 반대가 있음에도 총장이 학교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총장 독임제이기 때문에 추진할 수는 있으나, 교육부에서 받아들일 때 부담스러울 수 있음. 그런 상황이 되면 학내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올리라는 그런 절차가 있을 것인데, 여기서 예단해서 투표 구성 비율까지 논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짐. 지금은 양 대학의 통합 찬반 투표에 올릴 안을 만들 때의 절차를 정해주는 것임. 아까 논의된 미진한 부분은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일부 분과장의 임기를 '임기중'에서 '임명일로부터 1년'으로 수정해야 하고, 몇 퍼센트까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학생들의 대표를 분과에 참여시키도록 한다까지는 결정할 수 있다고 보여짐.
- 의원(○○○): 여기에서 의결하면, 통합 관련 내용은 대학평의회에서 통합 총괄위원회에 의결권을 위임해 주는 결과가 되는 것임.
- 의원(○○○): 통합총괄위원회에 분과장이 위원으로 들어오고, 총장이 위원장이 되면 통합을 반대하는 쪽에서 절차적 문제로 지적할 수 있기에 염려가 됨.
- 기획처장(○○○): 절차적 측면에서 신중해야 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경상 국립대 등 통합한 타 대학 사례를 참고해서 절차를 마련한 것임.
- 의원(○○○): 최종 의결은 총장이 하는 것으로 정하고, 통합총괄위원회에서 의결권을 빼고, 심의의 기능만 가지는 것으로 제안.
- 기획처장(○○○): 총장의 최종 의결은 구속력이 생겨버리고, 총장의 부담이 커짐.
- 교무처장(○○○): 의결권을 총장이 가지게 되면, 독단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 위원회가 있는 것임.
- 의원(○○○): 그렇다면 총괄위원회에서 분과장을 빼야 함. 분과장들은 무조건 찬성이 나오는 부동표임.

- 의원(○○○): 구성안 자체는 문제가 없음. 오히려 기획위원회와 총괄위원회가 분리되면 오해가 생길 여지가 크고, 향후 상호보완될 부분이 있음.
- 의원(○○○): 각 분과에 모든 직능단체 구성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면 최종 통합안이 나왔을 때 전체 구성원들의 합의가 됐다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의원(○○○): 최종 투표 전에 완벽한 통합 모델안으로 직능단체별 협의가 수반되어야 함. 기획위원회 위원들이 통합총괄위원회의 위원도 일부 겸하고 있어, 의결권이 있으니, 어느 정도 분립이나 견제의 필요성이 있음. 투표 비율 책정과 같은 아젠다는 사전에 논의해야 함.
- 기획처장(○○○): 총괄위원회가 구성되면, 바로 논의를 시작할 것임.
- 의장(○○○): 통합총괄위원회의 보직명이 명기되지 않은 전임교원 임기에 ‘임기중’을 ‘임명일로부터 1년’으로 수정하고, 통합기획위원회 등에 학생을 포함한 직능단체별 위원 참여 확대를 제안하는 것으로 대학평의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내겠고, 기타 논의된 우려 사항은 회의록에 남기면 되지 않을까 함.
- 의원(○○○): 안전으로 올라온 대학통합 논의 조직 구성(안) 자체에 대해 통과를 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거수해야 함.
- 기획처장(○○○): 이것을 대학평의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올린 게 아니고, 학무회의의 심의·의결 사항을 대학평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올린 것임.
- 의장(○○○): 저번 대학평의위원회 회의에서 통합 관련 논의를 시작해도 좋다고 심의 의견을 냈는데, 양교의 통합 모델을 만들기 위한 조직 구성을 하겠다고 심의 요청한 안에 대해 만약 거수를 해서 부로 결정한다면, 학무회의까지 거친 사항을 인정 안하고 여기서부터 절차를 진행하지 말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봄. 거듭 말하지만 통합 모델이 만들어졌을 때, 양교의 통합 찬반투표라는 중요한 절차가 남아 있음. 그리고 고등교육법 상에서 대학평의위원회에 학내 주요정책에 대해 의결 권능까지 부여했다는 주장도 있으나, 현 규정과 다수설은 심의 권능만 인정하고 있음. 또 충남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규정 제5조에 의하면, 대학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은 심의까지 가능. 심의·의결까지 가능한 사안은 대학평의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규정 등의 대학평의위원회 내부적인 사안임. 이에 의장 자격으로 아까 정리한 대로 2가지를 수정하는 것으로 대학평의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내겠음.

■ 기타논의사항

- 의견 없음

■ 심의결과

- 통합총괄위원회의 보직명이 명기되지 않은 전임교원 임기에 '임기중'을 '임명일로부터 1년'으로 수정 제안
- 통합기획위원회 등에 학생을 포함한 직능단체별 위원 참여 확대 제안

■ 폐회